


경제관계장관회의

24-19-4

(공개)

 역동경제로  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---

#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

---

2024. 10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민간투자 활성화방안(요약)

### I 추진 배경

- 민투법 제정('94) 이후 30년 간,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에 기여
  - \* 도로·철도·환경·교육 등 분야에서 146조원 규모, 853개 민간투자사업 추진
-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는 지속 증가하나 재정투자 여력은 제한적
- 최근 악화된 사업 여건과 불합리한 규제는 민자 활성화에 걸림돌  
→ 민간투자 30년 계기,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 혁신 추진

### II 중점 추진과제

#### 발굴·협상

- 1 (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) 개량운영형 대상 확대\*, SOC 재정사업 시설의 민자 전환 및 관리운영기간 연장 허용(최대 100년)
  - \* '운영 중인 민자 혼잡도로 확장 허용
- 2 (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활성화) 생활SOC 사업 투자자금 조달 지원\* 및 지역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(8대 권역, 신보)
  - \*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 신설(3,000억원), 통합 추진 시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 1%p 인하(BTO 15→14%, BTL 5→4%) 등
- 3 (결합형 민자사업\* 활성화) 주무관청 지정제도(민투심) 도입, 결합형 민자사업으로 재정절감 시 예산성과금 지급 확대
  - \* (예시) 상부 BTO시설(문화·체육시설 등, 민간보다 저렴한 사용료)에서 징수한 사용료로 하부 BTL시설(유수지 등) 임대료 납부
- 4 (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)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(일괄 민투심 심의), 우대보증 신설(보증료율 0.1%p 감면)

- 5] **(BTO 정부고시사업 확대)** 분야별 민자사업 추진계획 마련 후 국제 행사 발표(11월), 2조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쟁적 협의\* 우선 검토
- \* 단일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
- 6] **(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)** 유희 국·공유지 先 공개→민간의 사업 제안 공모 후 민자 절차 추진
- 7] **(재정-민자사업 연계 강화)** 예타 통과(면제)사업 중 필수 민자검토 대상 시설 확대(생활SOC·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중 제1종시설 교량·터널)
- 8] **(탄력적 사용료 및 소통 확대)** 대심도 도로의 탄력적 사용료 책정을 허용하고 적격성조사 시 최초제안자와의 소통 기회 확대

## 금융

- 9] **(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여건 개선)** “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” 도입(0.2조원+α) 및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여건\* 조성
- \* ‘만기 없는’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, 은행의 BTO 투자 위험가중치 조정(400→100%)
- 10] **(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)** 차입한도(30→100%) 확대 및 투자대상(100→90% 이상) 완화, 사모펀드의 공모 전환 활성화
- 11] **(신용보증 지원 확대)** 역대 최대 수준 보증 공급(2.4→4.0조원) 및 보증한도 2배 확대(1→2조원)
- 12] **(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)**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합리화\*
- \* 사용료가 적정수준(도로사업의 경우 도공 대비 1.1배 이내)이면서 정부의 수요위험 부담(ex. BTO+BTL, BTO-a, BTO-rs, MRG, MCC) 등이 없는 사업을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

## 건설·운영 및 지원

- 13] **(공사비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)** <sup>정부</sup>공사비 부담(21~22년) 완화 특례\* 등 마련
- \* (BTO) 최대 “21~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 상승률 차이의 50%”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용료, 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조정
- \*\* (BTL) ‘22.12.31일 이전 최초 고시되어 협약 체결된 사업 중 ‘가격산출기준일~고시일’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, ‘가격산출기준일~고시일’ 물가변동분의 50% 반영
- 민간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화 및 금융상품 개발(국토부)

- 14 (BTL 수익률\* 조정 주기 유연화) 5년 원칙→사업별 자율 선택  
 \*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수익률 = 5년 만기 국고채 금리+ $\alpha$ (가산율)
- 15 (재정행정 지원)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,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, 취득세 감면 연장(~27년) 및 운영비 소액 증액 시 민투심 면제
- 16 (부대사업 활성화) 부대사업 유형 확대(17→24개) 및 부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본사업과 일치(최대 10년→50년+ $\alpha$ )
- 부대사업 우대 보증\* 신설 및 부대사업의 전문기관 위탁·대행 허용
- \* 부대사업을 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고, 보증료를 0.1%p 인하
- 17 (지원기능 및 교육정보제공 강화) 기본계획 정비 및 표준안 세분화(추진방식, 대상별),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전문기관 확대(15→17개)
- 18 (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) 민투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및 주간행사 개최(11월)

### III 기대효과

- 민간투자 30조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및 건설 경기 보완\*\*
- \* SOC 예산(조원) : ('24) 26.4 → ('25안) 25.5(△3.6%)

### IV 추진계획

-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('24.10), 민간투자법 시행령('24.11) 개정 및 민간투자법 개정('24.12) 추진
-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

# 순 서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비전 및 추진체계도 .....	2
III . 중점 추진과제 .....	3
1. 사업발굴 · 협상 .....	
(1)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 .....	5
(2)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활성화 .....	7
(3)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 .....	8
(4)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 .....	10
(5) 수익형 민자사업의 정부고시 확대 .....	11
(6)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.....	12
(7) 재정-민자사업 연계 강화 .....	13
(8) 탄력적 사용료 책정 및 소통 확대 .....	14
2. 금융 조달 .....	
(9)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여건 개선 .....	15
(10)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.....	16
(11) 신용보증 지원 확대 .....	18
(12)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 .....	19
3. 건설 · 운영 .....	
(13) 공사비 변동 위험의 합리적 분담 .....	20
(14)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 .....	21
(15)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.....	22
(16) 부대사업 활성화 .....	23
4. 지원 .....	
(17) 지원기능 및 교육 · 정보제공 강화 .....	24
(18) 국제협력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 .....	25
IV . 향후 추진일정 .....	26

## I. 추진 배경

### □ 민간투자제도 30년 →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에 기여

- 민간투자법 제정('94) 이후 도로·철도·환경·교육 등 분야에서 146조원 규모(경상, 실시협약 기준), 853개 민간투자사업(이하 '민자사업')\* 추진

\* 수익형(BTO) 281개 사업(109.2조원), 임대형(BTL) 572개 사업(36.7조원)

-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·효율을 활용하여 공사기간 단축\*, 공사비 절감\*\* 등의 성과 달성

\* 재정사업 대비 공기 단축(KDI, '21) : 도로사업 약 △33개월, 철도사업 약 △55개월

\*\*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(KDI, '21) : 도로사업 △4.2%, 환경사업 △24.3%

### □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 지속 증가 → 재정투자 여력 제한적

- 국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GTX\*, 지방권 광역급행철도\*\* 및 혼잡도 완화,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도로·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사업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, 재정투자 여력\*\*\*은 제한적

\* GTX A~C는 '28~'30년 개통, GTX D~F는 '35년 개통 목표로 예타 등 추진

\*\*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中('24.4~)

\*\*\* 국가채무(중앙정부+지방정부) : ('13) 490 → ('23) 1,127조원

-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생활SOC의 확충이 긴요한 상황이며, 복합문화·환경시설 등 新유형 SOC\*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

\* "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" 민자적격성조사 中('24.2~), "도심 곤돌라 조성 사업"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'민투심') 의결('24.7)

### □ 최근 악화된 사업 여건 및 불합리한 규제는 민자 활성화에 걸림돌 → 민간투자 30년 계기,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 혁신

- 고물가\*·고금리\*\*로 인한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,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\*\*\* 등은 민자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

\*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(%) : ('20) 1.2 → ('21) 8.6 → ('22) 7.8 → ('23) 2.9

\*\* 한은 기준금리(%) : ('20.6) 0.5 → ('22.6) 1.75 → ('24.8) 3.5

\*\*\*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업 위험은 증가하나, 수익 창출 기회는 제한적

\*\*\*\* 민자사업 건수개 협약체결기준 : ('04~'08) 324 → ('09~'13) 234 → ('14~'18) 84 → ('19~'23) 113

## Ⅱ. 비전 및 추진체계도

### 목표

- 민간투자제도 30년,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 혁신
- 민간투자 확대(+30조원) 및 착공 기간 단축(△24개월)
  - 재정절감(△6조원) 및 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

### 3 대 전략

- ◇ 민간의 창의·효율 극대화
- ◇ 공공의 역할·책임 강화 +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
- ◇ 민자사업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

### 4대 분야 18개 중점 추진과제

#### 구분

#### 민간의 창의·효율 극대화

#### 공공의 역할·책임 강화

#### 발굴·협상

- ▶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
- ▶ 생활SOC 사업 활성화
- ▶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
- ▶ 탄력적 사용료 및 소통 확대

- ▶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
- ▶ BTO 정부고시사업 확대
- ▶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
- ▶ 재정-민자사업 연계 강화

#### 금융

- ▶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
- ▶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

- ▶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여건 개선
- ▶ 신용보증 지원 확대

#### 건설·운영

- ▶ BTL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
- ▶ 부대사업 활성화

- ▶ 공사비 변동 위험의 합리적 분담
- ▶ 재정지원 확대·행정절차 간소화

#### 지원

- 지원기능 및 교육·정보제공 강화
-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

### Ⅲ. 중점 추진과제 (4대 분야 18개 과제)

#### 사업 발굴 · 협상

1.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 
활성화

- ▶ 개량증설 사업 대상 확대
- ▶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
- ▶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민자사업 적극 활용
- ▶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

2. 지역밀착형 생활SOC  
사업 활성화

- ▶ 생활SOC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보증 신설
- ▶ 통합 생활SOC 사업 자부담 의무 출자비율 인하
- ▶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유도
- ▶ 8대 권역별 지역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

3.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

- ▶ 결합형 민자사업 주무관청 지정 제도 도입
- ▶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확대

4.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 
활성화

- ▶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
- ▶ 새로운 대상시설 우대 보증 신설

5. BTO 정부고시사업 확대

- ▶ 부문별 민자사업 5개년 계획 마련
- ▶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쟁적 협의 우선 검토

6.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  
사업 도입

- ▶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절차 마련

7. 재정-민자사업 연계 강화

- ▶ 재정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 개편
- ▶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확대

8. 탄력적 사용료 및 소통 확대

- ▶ 대심도 도로 등 탄력적 사용료 책정
- ▶ 적격성조사 시 최초제안자 소통 확대
- ▶ 사업제안 시 제안비용 최소화



금융조달	9.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‘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’ 도입</li> <li>▶ ‘만기없는’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</li> <li>▶ 은행의 인프라 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</li> <li>▶ 공공기관 출자 활성화</li> </ul>
	10.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</li> <li>▶ 사모펀드의 공모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</li> </ul>
	11. 신용보증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보증공급 확대(2.4 → 4.0조원 이상)</li> <li>▶ 보증한도 확대(최대 1 → 2조원)</li> </ul>
	12.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합리화</li> <li>▶ 민자금융 회수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</li> </ul>
건설·운영	13. 공사비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익형 민자사업 공사비상승 부담 완화</li> <li>▶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비상승 부담 완화</li> <li>▶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방안 마련</li> </ul>
	14.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</li> </ul>
	15.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유연화</li> <li>▶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</li> <li>▶ 민투심 상정 대상 간소화(운영비 소폭 증액)</li> <li>▶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(환경사업)</li> </ul>
	16. 부대사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역세권개발, 유원시설 등 부대사업 대상 확대</li> <li>▶ 부대사업 사용·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</li> <li>▶ 부대사업 우대 보증 신설</li> <li>▶ 부대사업 수행을 별도 법인에 위탁·대행 허용</li> </ul>
지원	17. 지원기능 및 교육·정보 제공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본계획 정비 및 표준안 확대 제공</li> <li>▶ 교육 상사회(온라인) 및 심화 교육(오프라인) 도입</li> <li>▶ 전문기관 지정 확대</li> <li>▶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</li> </ul>
	18.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 활성화</li> <li>▶ 민간투자사업 30주년 기념 주간행사 개최</li> </ul>

## 1.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\*의 추진 근거 등이 마련('22.7)되었으나, 개량·증설 시점, 대상 등은 제한적으로 규정

\*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·증설 후 개량·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(기본계획 제2조 제22호)

- (시점) 기존 민자사업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진 가능  
→ '운영 중'인 노후·혼잡 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량·증설 곤란

- (대상) 운영기간 만료 사업 증가\* → 대규모 개량·증설이 없는 경우 장기간(20년 이상) 효율적 시설 운영이 가능한 제도 부재

\* 관리운영기간 만료 예정 사업 : ('24~'30) 257개 ('30~) 596개

-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도 노후화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가 지속 확대\*될 것으로 예상되나, 민자사업 활용은 저조

\* 향후 4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장규모 연간 51조원으로 추계(제1차 기반시설관리기본계획)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개량·증설 사업 대상 확대

- 민자사업으로 '운영 중'인 노후·혼잡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개량·증설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\*

\* 기존 시설의 운영기간 중 개량·증설 목적의 총사업비 변경 허용, 개량·증설을 위한 추가 출자자 모집에 따른 지분구조 변경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범위에서 제외 등

- 차선(선로) 확장 이외에 노선 연장도 개량·증설에 포함하여 추진\*

\* ① 기존 노선 외 연장 구간만으로도 타당성 확보

② 재정지원(건설보조금 및 보상비) 및 요금 인상 無

## ②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

- 운영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**운영형 민자사업 구체화\*** 방안 마련('25년 연구용역 추진)

\* 대규모 개량·증설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운영형 민자사업의 세부지침 및 재무모델 마련 등

- 개량·증설을 위한 민간투자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**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** 등을 조정

《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 조정(안) 》

대상	절차	시기	
		현행	개선
모든 사업	관리이행계획 수립	운영종료 3년 전	운영종료 5년 전
민투심	PIMAC 검토의뢰	운영종료 2년 전	운영종료 3년 전
심의사업	기재부 협의	운영종료 1년 전	운영종료 2년 전

\* 기본계획 개정일 기준,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가 5년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 적용, 만료가 3년 이상 5년 미만 남은 사업은 신속히 관리이행계획 수립

## ③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민자사업 적극 활용

- ①**대규모 유지보수·개량비용이** 소요되거나 **혼잡도가 높아 증설 수요가** 있고 ②**운영기간 종료 등으로 관리운영권 설정이** 가능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**개량운영형 민자사업\*** 추진 검토\*\*

\* (민자사업 활용 예시) ①부대사업 연계형(BTO 또는 BTL 본사업 + 부대사업)

②결합형(BTO, BTL 등 두 개 이상의 본사업 추진)

\*\* (예시) 관련 내용 제2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('26~'30) 반영(국토부)

##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(50년+α, 최대 100년)

- **요금 인하 또는 개량·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** 위해 필요한 경우 **관리운영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** 있도록 허용

## 2.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활성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문화·복지·의료 등 민간투자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,
  - 소규모 사업 규모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투자자금 조달 및 공사비 절감 어려움,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저조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3,000억원 규모의 「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」 신설

- 다수의 소규모 생활SOC 민자사업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통합·인수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보증료율\*을 우대

\* 보증료율 최저(0.05%) 적용

#### ② 「통합 생활SOC 사업」 추진 시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 인하

-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시\*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 1%p 인하(수익형 15→14%, 임대형 5→4%)

\*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을 통합하여 합계 총사업비 2,000억원(BTL만 포함된 경우 1,000억원 이상)

#### ③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도

- 인구감소(관심)지역 지방소멸 대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활SOC 민자사업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·활용 유도(행안부)

\* 정주여건 개선 목적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실시협약 체결 시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·활용이 용이하도록 '26년도 기금 평가체계 반영 검토(활용범위 확대 등)

#### ④ 8대 권역별 지역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(신보)

- 신보 지역본부\*를 활용하여 생활SOC 사업 발굴~운영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·지역 중소건설사 대상 현장밀착형 컨설팅 제공

\* 8개 권역(서울, 강원, 경기, 인천, 충청, 호남, 대구경북, 부산경남)

### 3. 결합형 민간투자사업(본사업+본사업) 활성화

#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을 통합·연계하는 ‘결합형 민자사업’ 근거를 마련(‘20.2)하였으나, 관계부처 협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사례가 없음

\* (예시) 상부 BTO시설(문화체육시설 등, 민간보다 저렴한 사용료)에서 징수한 사용료로 하부 BTL시설(유수지 등) 임대료 납부 → 사용료·재정부담은 줄이면서 국민 편익 제고

#### 2 개선방안

##### ① 「결합형 민자사업 주무관청 지정 제도」 도입

- 민간사업자가 결합형 사업을 복수의 주무관청에 제안했으나 부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투심을 통해 主 주무관청 지정\*

\* 사업제안서를 각 주무관청과 기재부에 함께 제출 → 민투심을 통해 주무관청별 사업 규모, 사업 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主 주무관청 지정

- 主 주무관청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적격성조사·협상 등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행하되,
- 운영기간 종료 후 각 시설은 해당 주무관청으로 귀속

##### ② 결합형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확대

- 결합형 민자사업 추진으로 재정절감 시 主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확대\*

\* 산정된 금액의 1.3배 이내에서 지급(예산성과금 규정 제16조③ 개정)

### < (예시) 결합형 사업모델 >

- **(추진목적)** 임대형 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수익형 사업 연계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재정 절감 및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 제고
- **(추진예시)** 주민 기피시설이나 필수 산업시설을 지하화하며, 지상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민편의 제고 및 지역개발
  - 바이오가스화 시설, 우수지 등 환경시설을 지하 공간에 임대형으로 추진하고, 지상 공간에 수익성이 확보되는 공연·전시 등 복합문화·체육시설이나 국제회의시설 등을 수익형으로 추진
  - 지하 물류단지 등을 수익형으로 추진하며, 지상 공간에 어린이집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을 임대형으로 추진

#### < 우수지 복개 후 상부개발 >



#### < 철도 지하화 후 상부개발 >



#### < 기존 지상 물류터미널 >



#### < 지하화 후 상부개발 >





## 4.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대상시설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('20.3)에도 민투심 상정 부담과 사업 추진 위험 등으로 새롭게 발굴된 시설유형은 6건\*에 불과

\* 도시공원 케이블카,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, 복합행정타운,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,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공간, 한강공원 곤돌라

#### < 민간투자 대상사업 포괄주의 >

대상시설을 54개 시설로 제한하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 침해가 없는 모든 경제·사회기반시설 및 공용·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민투심 심의를 거쳐 추진 가능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「새로운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패스트트랙」 도입

-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'민투심')에 일괄 상정·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 추진 지원

\*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'가이드라인' 배포('24.6)→ 주무관청·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발굴하여 기재부 제출('24下)→ 민투심('25上)

#### ② 「새로운 대상시설 우대 보증」 신설

- 보증료율을 최대  $\Delta 0.1\%p$  감면하여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대상시설 민자사업\*의 금융비용 완화

\*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(민투심) 통과 후 5년 이내에 동일 시설유형으로 추진 되는 사업(적격성조사 의뢰일 기준)

## 5. 수익형 민간투자사업(BTO)의 정부고시사업 확대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수익형 사업(BTO) 추진 시 민간의 창의·효율 극대화\*를 위해 활발한 경쟁이 가능한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,

\* 창의적 설계공사 등을 통한 시설 효용성 제고, 총사업비 및 재정부담, 사용료 절감 등

- 정부고시사업 지연 시 주무관청의 사업 관리 부담 확대 우려 등으로 정부고시사업 비중 하락

\* 수익형 사업(BTO) 중 정부고시사업 비중 : 40%('94~'18) → 20%('19~'23)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부문별 「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」 마련

- 상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로·환경·항만 부문 등 우선 추진  
→ 향후 他분야로 확대하여 민자사업 추진 예측가능성 제고

\* (예시) 고속도로 건설계획('26~'30)(국토부) / 국가하수도 종합계획('26~'35), 자원순환 기본계획('28~'37), (환경부) /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('25~'30)(해수부) 등

- “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”에서 주요계획 발표(주무관청, 11월)

#### ② 대규모 국책사업(총사업비 2조원 이상) 대상 경쟁적 협의 우선 검토

- 대규모 정부고시사업의 사업자 평가·선정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 방식을 우선 검토하여 사업 추진 기간 단축

##### < 경쟁적 협의 >

단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없이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



## 6.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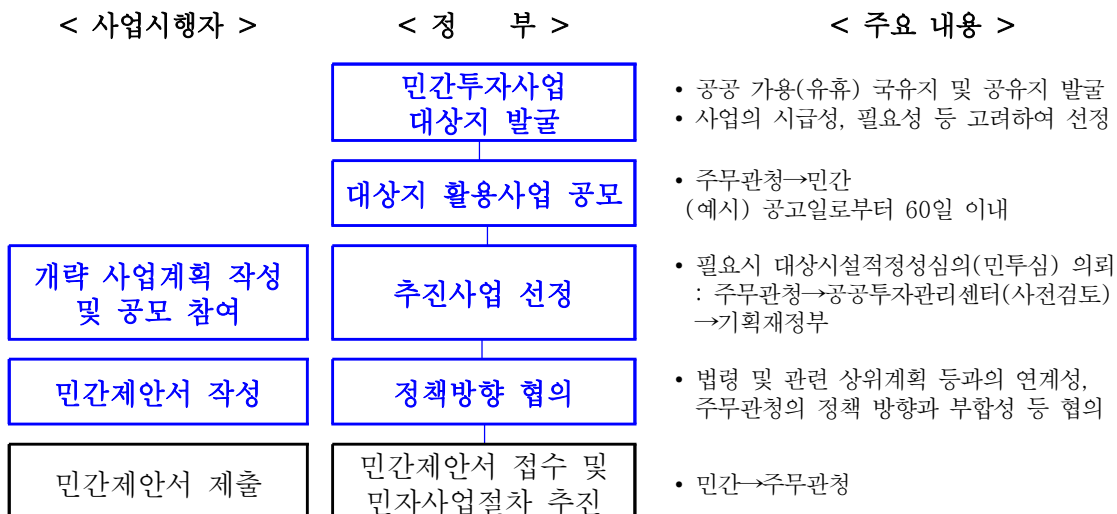
- 유휴 국·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·문화 등 사회·인구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하나,
- 주무관청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 사업 발굴이 어렵고, 민간사업자는 가용 부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진한 상황

### 2 개선방안

#### □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절차 마련

- ① (주무관청) 유휴 국·공유지를 사전 공개하여 민간에 공모  
\*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의 목표, 방향성, 최소한의 공공성 기준 등 제시
- ② (민간사업자) 해당 부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민자사업 제안
- ③ (사업 구체화) 우수 제안자 선정\* 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구체화한 후 민간제안서 제출  
\*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민간제안서 제출시 민투법상 최초제안자 자격 부여
- ④ (민자사업 추진) 민자적격성 조사 등 민자사업 절차 진행

#### < 참 고 >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절차(예시)



## 7. 재정-민간투자 사업 간 연계 강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예타 수행 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\*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구체화\*\*했으나,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이 제한적으로 규정

\* 유료 도로, 유료 터널, 유료 교량, 철도, 항만·공항, 수자원, 환경시설 등

\*\* 예타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명확화(예타운용지침 55조②, '22.12 신설)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 확대

- 생활SOC\*, 제1종시설물 교량·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혼잡도로를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포함

\* 어린이집, 유치원·학교, 도서관, 미술관, 과학관, 박물관, 생활(전문)체육시설

#### ② 재정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 개편

-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민간투자사업 원칙(기본계획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)\* 으로 명확화

\* (수익형) 사용료 수준, 수익성 / (임대형) 시급성, 기부채납가능성 / (공통) 재정여건, 정책방향

- 예타면제사업이라도 ❶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이면서, ❷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에 해당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\*

\* (예시) 초·중등 교육시설 신·증축,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환경사업 등

## 8. 탄력적 사용료 책정 및 소통 확대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사용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, 최초 민간제안자의 소통 기회 부족 등이 민자사업의 불필요한 지연 요인으로 작용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대심도 도로 등에 대한 탄력적 사용료 책정

-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포함(기본계획 별표7 개정)

\* 사용료 상한 제시기준(예시) : (現)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→  
(改)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 추가

#### ② 적격성조사 시 최초제안자의 소통 기회 확대

- 민자적격성조사시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·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(기본계획 제49조④ 신설)

#### ③ 사업제안 시 제안비용 최소화(70억원 → 10억원) \* 既추진('24.5)

- (민간제안) 민간제안서를 간소화하며 적격성조사 목적\*에 부합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초제안 가이드라인(안) 마련

\* 사전적격성심사 서류 20종→11종으로 축소, 기본설계보고서·설계내역서 등 7개 항목을 미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

- (정부고시)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(기본계획 제65조 제6항) 삭제

## 9.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여건 개선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투자자인 금융기관·연기금의 투자규모 축소로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2,000억원+α 규모의 「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」 도입('25.1)

- 민간투자사업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를 설립하여 민자사업의 출자금 모집 지원 \* 운용 : KDB 인프라 자산운용

##### < 출자 전용 인프라펀드 >

- (구성) 산은 1,000억원 + 신보 1,000억원 + 민간 α → 총 2,000억원 + α
- (투자 대상)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
- (운용 기간/방식) 최대 10년 / 「민투법」상 인프라펀드
- (투자 방식) ①사업별 출자지분의 1/3 이내, ②준공 시 투자금 회수
- (자금재조달 이익공유) 투자금 회수 시 발생하는 자금재조달은 이익공유 배제

#### ② '만기 없는'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 허용

- '만기 없는' 환매금지형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 근거 마련\* (민투법 제44조 개정) → 원금 상환 성격의 다른 계약상 의무\*\*가 없는 경우,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기타포괄손익 인식 가능

\* 사모펀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설정 가능(자본시장법 제249조의8·20)

#### ③ 은행의 인프라 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

-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\* 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은행의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(400%→100%)

\* (예시) 위험분담금(BTO+BTL, BTO-a, BTO-rs), MRG, MCC 등

#### ④ 공공기관 출자 활성화

- 정책적으로 추진이 시급하나, 금융여건 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출자 근거 구체화(기본계획 제25조⑥ 신설)

## 10.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「민투법」과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435개의 인프라펀드가 운용 중('24.8월 기준)이나,
  -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로 운용(평균 900억원)되어 투자 규모 제약 및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 제한

《 인프라펀드 운용 현황('24.8월) 》

	합계	민간투자법 근거	자본시장법 근거
합계	435개(40.0조원)	10개(6.2조원)	425개(33.9조원)
공모펀드	1개(3.0조원)	1개(3.0조원)	-
사모펀드	434개(37.1조원)	9개(3.2조원)	425개(33.9조원)

### 2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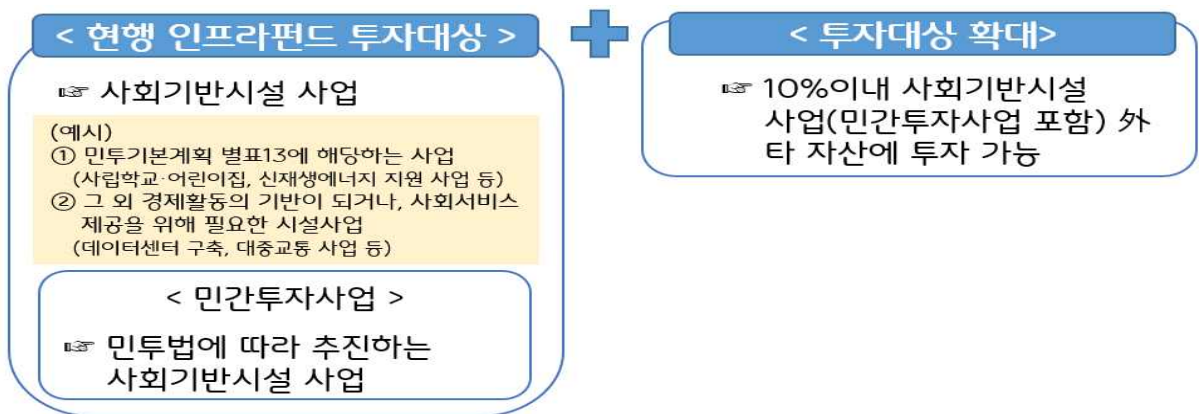
#### ① 민투법상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- 투자 여력(유동성)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%에서 100%으로 확대(민투법 제41조의5 개정)
  - \* (공모펀드 차입한도) 리츠(부동산투자회사법) 200%
-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\*에 공모상장 인프라펀드 추가
  - \* (현재) 펀드(주식형, 채권형, 혼합형, 상장 리츠 포함), 국내ETF(해외 투자상품포함)
- 자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 수익률 제고 및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 확대(민투법 제43조 등 개정)

《 공모펀드 투자대상 규정 비교 》

구분	투자대상 규정
인프라펀드 (민간투자법)	(現) 사회기반시설사업에 100% 투자 → (改) 사회기반시설사업에 90% 이상 투자
인프라펀드 (자본시장법)	사회기반시설에 50% 이상 투자
리츠 (부동산투자회사법)	부동산에 70% 이상 투자

《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개념도 》



②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

○ 「자본시장법」상 사모펀드의 「민투법」상 공모펀드 전환 활성화

\* 민투법상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대비 성과보수, 분리 과세 등에서 유리

- 「민투법」상 공모인프라펀드 운용규제 준수 여부\*, 공모 전환 의사 등 확인하여 공모 전환 유도

\* 자본금, 투자 대상, 차입 한도 등

※ (참고) KB발해인프라펀드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진행 중

- 맥쿼리 상장('06.3월) 이후 18년 만에 두 번째, 국내 자본 중 최초 「민투법」상 공모인프라펀드
- 상장 후 신주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여력 확보 및 민자사업 투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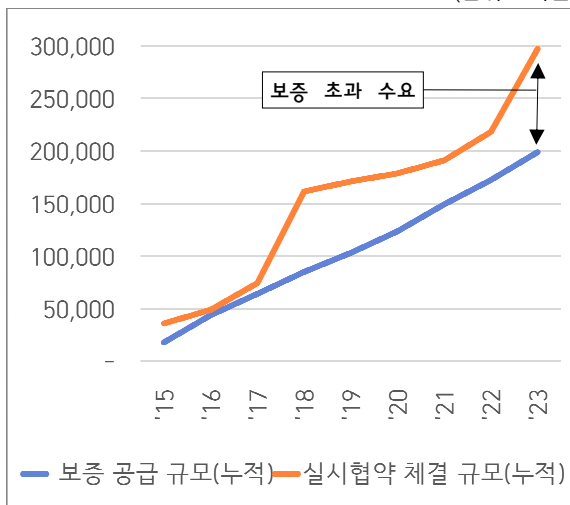
## 11. 신용보증 지원 확대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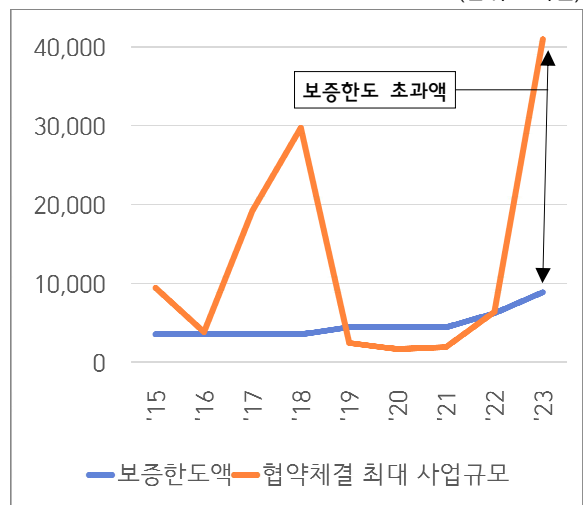
- 민자사업 대형화\*, 고금리·고물가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증공급 규모는 매년 유사한 수준

\* 주요 대형 민자사업 총사업비 규모(조원, 불변) : GTX-B 4.3조원, GTX-C 4.6조원

《 누적 보증공급·협약체결 규모 비교 》  
(단위 : 억원)



《 보증한도액·협약 최대사업규모 비교 》  
(단위 : 억원)

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보증공급 대폭 확대(2.4 → 4.0조원)

-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'25년 최대 보증공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4.0조원으로 대폭 확대

#### ② 보증한도 확대(1 → 2조원)

- 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1 → 2조원으로 2배 확대(민투법 시행령 개정, '24.11)

## 12.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장기간 지속되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,
  -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의 범위가 과도\*하여 초기 투자 잠김(lock-in) 효과로 효율적 투자를 저해

\* 적정 수준의 사용료(도로사업의 경우 도공 대비 1.1배 이내)를 설정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(MRG), 최소비용보상(MCC), 위험분담금 등이 없는 사업까지 포함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합리화

- 수익형 민자사업 중,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사업\*에 대해서는 유연한 금융조달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(기본계획 제27조① 개정)

\* ①사용료가 적정수준이면서, ②MRG 등 사업 위험에 대한 재정지원 無

#### ② 민자금융 회수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

- (단기) 민자금융 회수시장을 통한 거래를 희망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인프라인포, 금투협 홈페이지 등에 분기별 공개
- (중장기) 민자금융 회수시장을 위한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검토



## 13. 공사비 변동 위험의 합리적 분담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최근 공사 자재비 및 노무비 등 건설원가의 급등\*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 발생

\*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%) : ('20) 0.5 → ('21) 2.5 → ('22) 5.1 → ('23) 3.6

\*\*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(%) : ('20) 1.2 → ('21) 8.6 → ('22) 7.8 → ('23) 2.9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 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

- '21~'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, ①불변가격 기준시점이 '20.12.31일 이전이면서 ②현재 협약 체결 전인 BTO사업 대상 - 총사업비의 최대 4.4%\*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\*\* 마련(기본계획 제168조의4 신설)

\* '21~'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(16.4%)과 CPI 상승률(7.6%) 차이의 50%

\*\* 이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사용료,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 (단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,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고려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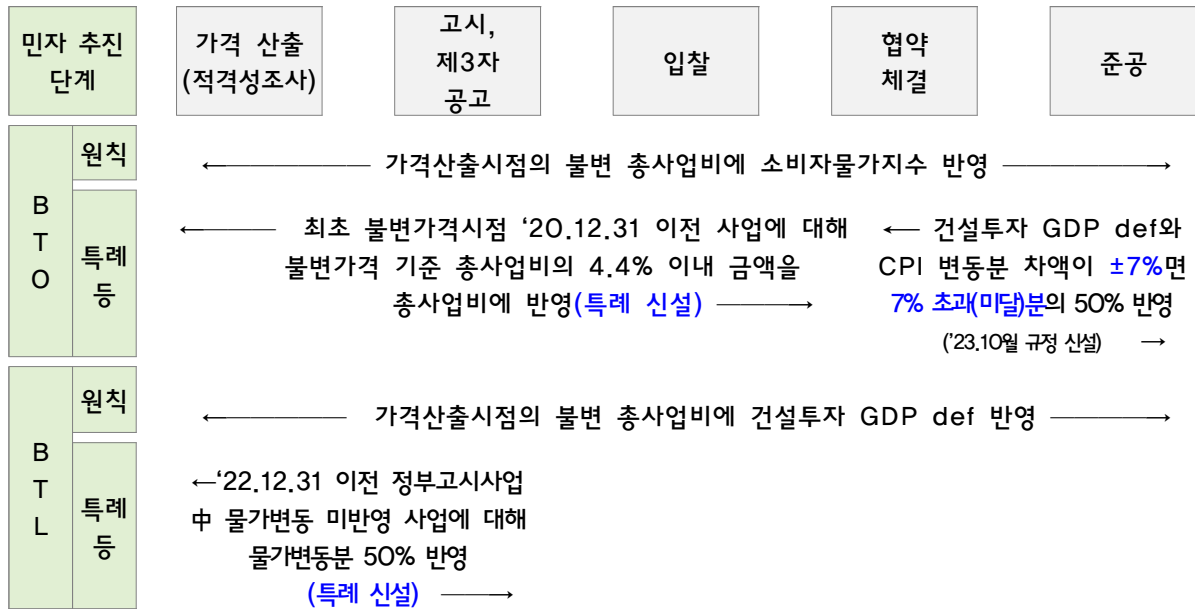
#### ②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(불변가격 기준일 조정)

- ①'22.12.31일 이전 최초 고시하였으며, ②현재 협약 체결되어 있고, ③불변가격 기준일을 고시일로 하면서 ④'가격산출기준일~고시일'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BTL사업(정부고시) 대상으로,  
- '가격산출기준일~고시일'의 물가변동분 중 50%를 인정하는 특례\* 마련(기본계획 제168조의5 신설)

#### ③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방안 마련

- 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, 이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
- 건설협회,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하여 건설공사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추진(국토부)

## 《 공사비 위험 합리적 분담(안) 》



## 14.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\*의 조정주기(5년)가 투자자별 선호 만기\*\*와 불일치하여 원활한 금융조달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 발생

\*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= 5년 만기 국고채 금리+ $\alpha$ (가산율)

\*\* (연기금투자물) 초단기 1년 선호, (은행) 단기 2~3년 선호, (보험) 장기 10년 이상 선호

### 2 개선방안

#### □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(5년 원칙 → 사업별 자율성 부여)

- 사업별 특성 및 금융조달 여건\*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익률 조정 주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

\* (예시)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주요 투자자를 ①연기금투자물, 은행 등 단기 투자자로 계획하는 경우 짧은 주기로, ②보험 등 장기 투자자로 계획하는 경우 긴 주기로 선택 가능

## 15.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획일적 건설보조금 집행, 취득세 일몰 도래(~'24)\*, 소액의 운영비 변동에 대한 민투심 상정 및 환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의무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부담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유연화(분기별 → 분기별·월별 지급 가능)

- 분기별 첫 두 달에 대해 공정률을 고려하여 보조금 일부 지급\*하고 마지막 달에 기성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 도입('24.10)

\* (예시) 기성 확인 없이 감리 확인만 거쳐 실적공정률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

#### ② 민간투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

-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(50%) 조항\*의 일몰기한 3년 연장(~'27)

\*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(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) 제1항 제2호

#### ③ 민투심 상정 대상 간소화(운영비 소폭 증액)

- 법령 및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운영비(재정지원) 소액 증가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민투심 면제(기본계획 제60조② 개정)

#### ④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(환경분야)

- 지자체의 환경 민자사업(BTO)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고, 국고보조율은 하향(20%p) 조정(환경부)

\* (기존) '총사업비 × 재정보조율 60%' 금액의 50%는 국고, 나머지 50% 지방비  
(개선) '총사업비 × 국고보조율 30%'하여 국고 先 산출, 잔여액 민간투자비+지방비 부담

## 16. 부대사업 활성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사용료 인하, 재정지원 절감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다소 부진하여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역세권개발, 유원시설 등 부대사업 대상 확대

- 부대사업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17개에서 24개\*로 확대(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)
  - \* 현재 주택건설, 택지개발, 물류터미널, 항만운송 등 민투법에 열거된 17개 → 역세권 개발, 유원시설, 장사시설 설치, 버티포트 개발 및 도심항공교통사업, 여객자동차 운송, 노인주거(의료)복지시설, 동물장묘시설 사업 +7개 확대

#### ② 부대사업 사용·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

- 부대사업 관련 국공유재산 사용·수익기간을 본 민자사업 무상사용기간(50년+a)과 일치\*하도록 법률 개정
  - \* 부대사업 사용·수익기간 현행 최대 10년(행정재산의 경우, 국유재산법 제35조②, 공유재산법 제21조에 근거) → 개정 50년+a으로 40년 이상 확대

#### ③ 부대사업 우대 보증 신설

- 부대사업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
- 부대사업 이익이 총사업비 대비 1.0% 이상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.1%p 인하 적용

#### ④ 부대사업 수행을 별도 법인에 위탁·대행 허용

- 부대사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\*에 부대사업 수행을 위탁·대행하는 방식의 부대사업 추진 허용
  - \* (예시) 주택건설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법인을 활용하여 부대사업 수행

## 17. 지원기능 및 교육·정보제공 강화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최근 민자사업의 다양화 및 복잡화 추세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, 인프라인포\*를 통해 제공 중인 정보가 제한적

\* 국민, 민간사업자, 주무관청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·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시스템

### 2 개선방안

#### 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정비 및 표준안 확대 제공

- 제도 변경을 반영한 조항 제·개정 및 이에 따른 각 조항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정비
-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표준안을 추진방식·대상별로 세분화

\* 추진방식(BTO, BTL, BTO-a, BTO+BTL 등), 대상(도로, 철도, 항만, 환경, 교육, 국방 등) 등

#### ② 교육 상시화(온라인) 및 실무 심화교육(오프라인) 도입

- 온라인 기초 교육은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\*, 대면 교육은 사례 중심 심화내용으로 구성, 교육 기회 확대\*\*

\* PC, 모바일 등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플랫폼으로 상시 제공(연 70→365일)

\*\* 교육 횟수(연 2→4회), 정원(80→160명) 확대하여 교육대상자를 4배 확대

#### ③ 전문기관 지정 확대(15 → 17개)

- 전문기관에 인천연구원(공투센터), 경북연구원(공투센터) 추가

\*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사업비 2,000억원(BTL 1,000억원) 미만인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서 검토(경제적 타당성, 재정지원 방식·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) 수행 가능

#### ④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 강화

- 민원·질의회신 참고 사례, 정책·연구자료 등 민자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  
- 통계자료를 엑셀 등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제공하여 활용도 제고

## 18.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 환경 조성

### 1 현황 및 문제점

- 지난 30년 다양한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 공급해왔으나,
  - 민자사업의 필요성,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
- 한편, 아시아 국가들은 30년간 민간투자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우리나라에 높은 관심

### 2 개선방안

#### ◇ 민투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컨퍼런스 및 주간행사 개최

- (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) 국제 행사(11.12-11.13)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제도의 성과·정책방향 공유 및 국제협력 활성화
  - 주무관청, 업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 발표
  -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
- (30주년 기념 주간행사) 주간행사(11.11-15)를 개최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
  - (학술 포럼) 학술 세미나(11.14)를 개최하여 민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(민간투자학회)
  - (온·오프라인 이벤트) 다양한 홍보 이벤트 실시(11.11-11.15)

## 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과제	담당	일정
<b>1.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</b>		
▶ 개량증설사업 대상 확대	기재부	'24.10
▶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		
• 운영형 민자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	기재부	'25.상
•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 조정	기재부	'24.10
▶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민자사업 활용	국토부	'25
▶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	기재부	'24.10
<b>2. 생활SOC사업 활성화</b>		
▶ 생활SOC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보증 신설	기재부	'24.10
▶ 소규모 생활SOC 통합추진시 자기자본 출자비율 인하	기재부	'24.10
▶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도	행안부	'24.12
▶ 8대 권역별 지역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	기재부	'25.1
<b>3.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</b>		
▶ 결합형 민자사업 주무관청 지정 심의 도입	기재부	'24.10
▶ 결합형 사업 예산성과금 심사 우대	기재부	'24.12
<b>4.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</b>		
▶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	기재부	'24.10
▶ 새로운 대상시설 우대 보증 신설	기재부	'24.10
<b>5.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 확대</b>		
▶ 부문별 민자사업 추진 계획 마련		
• 상위계획 등에 민자사업 추진계획 포함	국토부 환경부 해수부	'25
• 민간투자 협력 국제컨퍼런스 발표	주요 주무관청	'24.11
▶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적 협의 우선 검토	기재부	'24.10
<b>6.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</b>		
▶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절차 마련	기재부	'24.10
<b>7. 재정-민자사업 연계 강화</b>		
▶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확대	기재부	'24.하
▶ 재정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 개편	기재부	'24.10
<b>8. 탄력적 사용료 및 소통 확대</b>		
▶ 대심도 도로 등 탄력적 사용료 책정	기재부	'24.10
▶ 적격성조사시 최초제안자 소통 확대	기재부	'24.10

추진과제	담당	일정
<b>9. 투자자금 다양화 및 유입확대</b>		
▶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	기재부 (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)	'25.1
▶ '만기 없는'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	기재부	'24.하
▶ 은행의 인프라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	금융위	'24.10
▶ 공공기관 출자 활성화	기재부 국토부	'24.10
<b>10.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</b>		
▶ 공모인프라펀드 인센티브 강화	기재부 금융위	'24.하
▶ 사모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	기재부 금융위	'24.하
<b>11. 신용보증 지원 확대</b>		
▶ 보증공급 확대(2.4 → 4.0조원 이상)	기재부	'25.1
▶ 보증한도 확대(최대 1 → 2조원)	기재부	'24.11
<b>12.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</b>		
▶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합리화	기재부	'24.10
▶ 민자금융 회수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	기재부 (금투협)	'25
<b>13. 공사비 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</b>		
▶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 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	기재부	'24.10
▶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	기재부	'24.10
▶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방안 마련	기재부 국토부	'24.하
<b>14.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</b>		
▶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	기재부	'24.10
<b>15.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</b>		
▶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유연화	기재부	'24.10
▶ 민간투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	행안부	'24.하
▶ 민투심 상정 대상 간소화(운영비 소폭 증액)	기재부	'24.10
▶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(환경)	환경부	'24.10
<b>16. 부대사업 활성화</b>		
▶ 역세권개발, 유원시설 등 부대사업 대상 확대	기재부	'24.11
▶ 부대사업 사용·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	기재부	'24.하
▶ 부대사업 우대 보증 신설	기재부	'24.10
▶ 부대사업 수행을 별도 법인에 위탁·대행 허용	기재부	'24.10
<b>17. 지원기능 및 교육·정보제공 강화</b>		
▶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정비 및 표준안 확대 제공	기재부	'25
▶ 교육 상시화(온라인) 및 심화교육(오프라인) 도입	기재부	'24.10
▶ 전문기관 지정 확대	기재부	'24.10
▶ 인프라인포 확대개편을 통해 종합적 정보제공	기재부	'25.1
<b>18.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</b>		
▶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 활성화	기재부	'24.11